

초고유가 에너지절약대책 세부 시행방안

- 초고유가 대응 국무총리 특별지시 관련 -

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24)

■ 수립목적

「정부의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대책('08. 7. 6.) 및 국무총리 특별지시(2008-5호, '08. 7. 7)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 마련

■ 분야별 세부시행방안

가.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홀짝제로 전환

- ◎ 적용일시
 - '08. 7. 15부터 별도지시가 있을 때 까지
- ◎ 적용대상기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제1항(舊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 동법 제76조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 ◎ 적용대상 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차
 - 일반인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에 따라 공공기관 출입 통제
 -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용주차장(환승주차장)은 승용차요일제를 적용
 - * 렌트카 및 리스카는 홀짝제 및 승용차요일제 적용대상
- ◎ 적용방법
 - 홀수날은 홀수번호 차량, 짝수날은 짝수번호 차량 운행
 - 31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홀짝제 전면해제
- ◎ 기관의 시행의무
 - 해당공공기관은 홀짝제 운영을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맞는 페널티 부과방안 마련
- ◎ 제외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29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차량 및 7인승 이상 관용승용차량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2008-3호(2008. 6. 12))

제29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 단, 경차·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 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긴급 자동차·보도용 자동차·외교용 자동차·군용 자동차·경호용 자동차·화물 자동차·특수 자동차·승합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은 별도비표 등 조치

나.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 50%이상 우선구매 및 2012년까지 완료

◎ 승용차의 내구년한이 도래한 경우 점진적으로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로 교체

- 기관보유 승용차가 2대 이하인 경우 자율적으로 선정 가능

다. 업무용차량의 운영을 30%까지 줄일 것

◎ 기관실정에 맞게 운행감축방안 마련 시행

* 2부제 시행으로 50% 감축운행되나 7인승 이상 승용차량 등에 외사항을 감안하면 30%이상 감축효과 예상

라. 공공건물의 실내온도를 여름철 27℃, 겨울철 19℃

◎ 여름철 27℃는 최저유지기준, 겨울철 19℃는 최고유지 기준이므로 동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마. 엘리베이터 4층이하 운행금지, 5층이상 격층운행

◎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국무총리 지시대로 운영

- 다만, 공공기관이 일반인과 같이 사용하는 건물 등은 기관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 가능

* 환자, 장애인, 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용 가능

바.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시설에 대한 경관조명 시설의 사용제한

◎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에 대한 경관조명 사용제한(금지) 적용시간은 일몰후부터 일출시까지이며,

- 유형문화재 및 사적지 등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제외 가능

- 민간주체가 운영하는 경관조명이라도 지나칠 정도의 과다조명일 경우 기초지자체에서 사용자제 권고

사.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조명구간의 가로등 부분소등

◎ 적용시간 : 23:00부터 자동차 운행이 적은 익일 일출시까지

◎ 적용대상 : 노폭 12미터 이상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의 가로등

◎ 적용방법 : 설치된 전체 가로등에 대한 격등제 실시

◎ 적용제외 : 횡단보도 주변, 안전 및 방법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아. 야간 근무자가 국소조명(스텐드)을 활용할 수 있게 조치

◎ 야간의 경우 근무인원의 1/3이하만 근무할 경우 사무실 조명은 소등하고 국소조명 권장

◎ 각 기관별 운영지원과(회계·경리)에서는 각사무실별 국소조명수요를 파악하여 필요수량 공급

■ 기타 및 행정사항

가. 통근버스·셔틀버스 확충 및 업무용 택시제 운행확대

- ◎ 시내 공무 출장시 공용차량 대신 영업용 택시 활용
 - 조기 출근 및 심야 퇴근 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각기관별 운영지원과에서 세부시행방안 마련 시행
 - 기본원칙은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경우 사용”에 한함
- ◎ 운영지원과(총무부서)는 통근버스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행정안전부는 통근버스 및 셔틀버스 운용계획에 반영
- 나. 각부처별 시행계획 수립 및 교육·홍보강화
 - ◎ 각부처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절감을 실천하고,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
 - ◎ 소속직원들의 이해와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최대전력수요 6,247만8천kW로 사상 최고치 기록

문의 | 한국전력거래소 급전운영팀 (02-3456-6811~6)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찜통더위가 계속 되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국의 전력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하였습니다.

전력거래소 (이사장 오일환)는 7월 9일(수) 낮15시 현재 최대전력수요가 6,247만 8천kW를 돌파함으로써 종전기록인 지난 해 8월 21일(화)의 6,228만5천kW 보다 약 19.3만kW를 초과하였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금일 최대전력 발생 시의 예비전력은 560.6만kW(예비율 9.0%)로써 추가적인 수요증가에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장마가 지속되면서 최대전력수요가 5,000만kW 초반수준에 머문 반면 금년에는 일찍부터 시작된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력수요가 6,000만kW를 돌파하면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전력사용량 증가추세는 이번 더위가 계속되는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장마전선이 남하하는 11일쯤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도 최대전력 수요는 전년대비 4.1% 증가한 6,482만kW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때의 예비율도 10.6%(예비력 688만kW) 수준으로 전력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력수요 기록갱신 내용

(단위 : 만kW)

구 분	당일최대	증 감 (증가율)	전년기록
최대전력	6,247.8(15시)	19.3(0.3%)	6,228.5('07. 8. 21)
순시전력	6,268.0(14:21)	20.0(0.3%)	6,248.0('07. 8. 21)

◎ 전력수급 실적

(단위 : 만kW, %)

구 분	설비용량	공급능력	최대전력	공급예비	공급예비율
15시	7,035.3	6,808.4	6,247.8	560.6	9.0%

◎ 지역별 기온(15시 기준)

(단위 : °C,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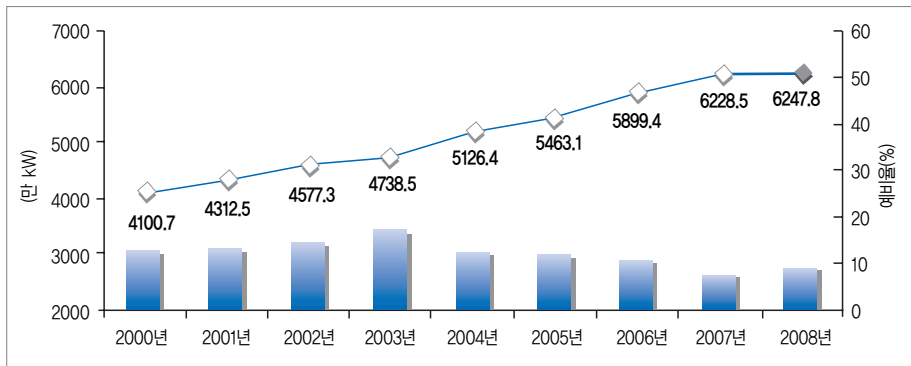
구 분	서 울	강 령	대 전	광 주	대 구	부 산
기 온 (블랙지수)	31.7(구름) (81)	32.0(구름) (81)	32.9(구름) (81)	34.0(구름) (83)	34.0(구름) (83)	26.9(구름) (78)

<연도별 최대전력 수요실적>

(단위 : 만kW, %)

연 도	일 시	설비용량	공급능력	최대수요	예비전력	예비율
'00	8.18(금) 12시	4,787.6	4,607.8	4,100.7	507.1	12.4
'01	7.26(목) 15시	4,963.2	4,869.9	4,312.5	557.4	12.9
'02	8.29(목) 15시	5,279.9	5,211.3	4,577.3	634	13.9
'03	8.22(금) 12시	5,608.1	5,548.8	4,738.5	810.3	17.1
'04	7.29(목) 12시	5,912.9	5,752.8	5,126.4	626.4	12.2
'05	8.17(수) 12시	6,173.7	6,081.8	5,463.1	618.7	11.3
'06	8.16(수) 12시	6,477.8	6,518.3	5,899.4	618.9	10.5
'07	8.21(화) 15시	6,719.6	6,677.8	6,228.5	449.3	7.2
'08	7.9(수) 15시	7,035.3	6,808.4	6,247.8	560.6	9.0

최대수요 증가추이



韓총리, 전력수급 상황 직접 챙겨

- 7.13일 오후, 전력거래소 방문 -

문의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02-2110-4900)

- 한승수 국무총리는 7.13(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소를 방문하여 최근의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였다.
 - ◎ 총리가 전력수급 현황을 직접 방문한 까닭은, 지난 7. 9(수) 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인 6,248만kW를 기록하는 등 때 이른 폭염으로 전력수급 상황이 나빠질 우려가 제기된 때문이다.

- 韓총리는 당분간 고온 다습한 기온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을 인용하면서, “단기적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수급대책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 특히, 원전을 비롯해서 주요 전력공급 설비들이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신속한 복구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하였으며,
 - ◎ 함께 방문한 지경부 이재훈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생 활화 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정부는 금년 여름철 전력수요가 최대 6,482만k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으며(6.11일), 발전소 정비계획 등을 조정하여 공급능력을 최대화하고,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감축하는 내용의 전력수급대책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가스사고 5월말 현재 23.9% 감소

- 제15회 가스안전축진대회, 업계·정부 가스안전 결의 다져 -

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5)

■ 가스업계와 정부는 가스사고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스안전문화 정착을 다짐하는 「제15회 가스안전축진대회」를 6. 27(금) 오전 11시 63빌딩 국회의의장에서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에는 가스업계, 소비자 단체, 정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안전 우수사례 발표, 對국민 가스안전결의 등의 순서로 개최되었다.

◎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가스안전을 실천해온 한국LP가스공업협회 유수륜 회장을 비롯한 유공자·단체에 훈·포장 등 56개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 * 지식경제부 이재훈 제2차관, 전국주부교육중앙회 이윤자회장 등 참석
- * 한국LP가스공업협회 유수륜 회장은 동탑산업훈장, 서울산업대학교 이수경 교수는 녹조근정훈장의 영예를 안았다(세부내역 별첨)

■ 이날 행사에서 이재훈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 환율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 보다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가스사고는 사회 불안을 조성하고 우리경제에도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스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가스업계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또한 김 국장은 1995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사고 이후 가스소비량은 연평균 9.3% 증가한 반면, 가스사고는 11.5%로 감소했으며,

◎ 특히 금년도에는 5월말 현재 가스사고가 전년동기 대비 23.9% 줄어들어 고무적이라고 언급하고 이를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가스산업인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 이와 더불어 김 국장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는 우리나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국가 신인도를 추락시키는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 가스안전관리 종사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견인차이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확대를 통해 가스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율안전관리가 기업의 최고 경영가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 부문의 규제 합리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

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02-2110-5441)

-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 부문의 규제 합리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동 시행규칙 개정명안은 '08. 6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7월 중 공포 예정이고,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업자 편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

가)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로 전국 4천7백여 판매사업자의 과도한 서류제출로 인한 불편을 해소 (규제개혁 추진목록 48)

◎ 판매사업자가 LPG를 공급할 경우 종전에는 행정관청에 수요자수 만큼의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사본을 제출하고,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 확인서 및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토록 하고 있었으나,

◎ 개정명에서는 행정관청에 다수의 수요자에 대한 소비설비안전점검결과를 하나의 안전점검 총괄표에 기록하여 그 사본을 제출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교부하여 할 상기 서류는 감축하는 대신 그 내용을 안전공급계약서에 포함되도록 개선함으로써

- 다수 판매사업자의 불편 해소 및 232개 행정관청(시·군·구)의 수요자수 만큼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 사본 보관 등에 따른 행정낭비 해소

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 주기 현실화로 충전사업자의 과도한 점검에 따른 부담완화 및 점검의 실효성 확보

◎ 충전사업자가 LPG자동차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하여 종전에는 “LPG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할 때마다”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시설에 비해 점검횟수가 과다하고 충전 대기차량 증가 등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 개정명에서는 이를 “수요자가 요청할 때 마다” 실시토록 개진함으로써 전국 1,500여 충전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

고, 관련 의무가 현실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

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사용시설 변경공사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미한 변경검사의 경우에는 완성검사 대상시설에서 제외

◎ 배관길이 20m이하의 변경공사 또는 조정기, 연소기(보일러, 가스렌지) 등의 수량증가에 따른 변경공사 등의 경우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국 15만개소의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

라)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 확대로 전국 470만에 이르는 용기가스소비자의 권익보호

◎ 종전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또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도 소비자보장책임보험의 보상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 도모

2) 가스사고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해 허가대상 가스용품 추가

◎ 용접 절단기용 압력조정기를 허가대상 가스용품으로 추가하여 연결부 치수 및 모양을 표준화함으로써 차단기능형 밸브 보급시 발생하는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소

3) 공인검사기관에게도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검사를 허용함으로써 현행의 독점 검사체계를 개선,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규제개혁 추진목록 11)

◎ 종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독점하고 있었던 LP가스특정사용시설 검사기능을 (주)도시가스검사기술, 한국가스검사기술(주) 등 공인검사기관에게도 허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검사수준의 향상 도모

4) LPG충전소, 저장소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순수기술적 사항은 가스기준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치수, 재질, 방법 등 순수기술적 사항은 상세기준으로 정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운용토록 함으로써 기술변화에의 신속한 대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가스 사고 예방에 기여

- 동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되면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추가 등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임
- 우리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전성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건물에너지 정책 포럼」개최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홍보교육실 (031-260-4395)

- 에너지관리공단은 건물분야 기후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기후변화대응 건물에너지 정책포럼」을 7월 2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
-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건물부문 에너지정책을 살펴보고 이의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은, 정부 및 각 시도관계자, 건설관련사, 학계 및 연구기관 실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 ◎ 연세대학교 이승복교수(저에너지친환경공동주택연구단장)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선진형 건물에너지정책”에 대한 발표와
 - ◎ 서울시 에너지정책담당관인 김영한과장의 “서울시 건물에너지 효율화 추진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 이어서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택도시연구원, 삼성건설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패널들이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건축물인 패시브하우스, 그린빌딩 등과
 - 유럽연합 27개국이 모든 건물에 대해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선진형 건물에너지평가제도인 EPBD(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 Directive),
 - 건물에너지효율화사례 및 건축단계별로 구분한 에너지효율화 전략,
 - 자연과 기후에 순응하는 건축의 시대적 의미 등건물분야 에너지정책 및 기술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 아울러 본 포럼에서는 참석자 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 건물에너지 정책에 대한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 건물분야 선진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본 포럼이 선진형 건물에너지 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국내 건물에너지효율화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공동주택(아파트) 계속사업 설명회 개최

문의 | 에너지관리공단 홍보교육실 (031-260-4395)

-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6월 30일 에너지관리공단 본사 대강의실에서 건설시행사 및 전문기업 관련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의 공동주택(아파트) 계속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태양광주택10만호 보급사업 공동주택(아파트) 계속사업'

'04년부터 시행된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이 당해년도 설치 준공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되었던 점을 개선하여, 금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사업기간을 최대 3년까지로 연장하여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보조하는 사업

- 이번 설명회는 건설시행사(시공사) 및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공동주택(아파트)의 자가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무상 지원하는 태양광주택10만호보급사업 공동주택(아파트) 계속사업 지원에 대한 안내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 ◎ 사업 추진배경,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의 설명과 공동주택 태양광설비보급 사례 및 설치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 ◎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간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력거래소,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문의 | 한국전력거래소 국제정보통계팀 (02-3456-6683)

전력거래소는 지난 7월 4일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전력산업 특화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착수함과 동시에 7월 9일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개발방향 및 전략 등을 점검하였다.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사업은 약 6개월의 사업기간을 통하여 디지털시대에 부응한 전문 도서관리 솔루션

선 도입을 통한 도서관리 표준을 적용하고, 웹수집기 및 검색엔진을 적용하여 최신 정보검색 및 수집기능을 구현하고, 기존의 정보시스템들의 메뉴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고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사업은 2008년 4월 29일 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를 게시한 후 약 50일 동안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발업체를 선정하였다. 이번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자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전자도서관시스템 구축 사업을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중장기 경영과제로 추진 중인 전력산업을 선도하는 '전력정보센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주택 제외 실내온도 제한” 78%가 찬성 “대형건물 위반때 과태료등 필요”는 72%

(주)코리아리서치 1000명 설문...

온도제한 필요건물은 공공기관-백화점-은행 順 꼽아

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 (02-2110-5424)

- 건물의 적정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여름철 26℃ 이상, 겨울철 20℃ 이하)와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의 78.1%가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7.12일 (주)코리아리서치센터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의뢰로 전국 16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적정냉난방 온도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 그 결과, 78.1%가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16.5%(모름/무응답 5.4%)에 불과했다.
-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가 가장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40.6%), 백화점·대형마트(21.1%), 은행(11.7%)의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 응답자의 76.6%는 여름철 백화점·은행 등에서 과도한 냉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 냉난방 온도제한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유가 등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가 51.9%로 가장 높게 나왔고, 뒤를 이어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18.5%)', '환경보호(13.3%)',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이익에 기여(11.3%)' 순으로 나타났다.

■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제도를 도입할 경우, 위반시 제재수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 대형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는 과태료 부과(43.5%)나 주위·경고와 같은 행정조치(28.2%) 등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에 달했다.

◎ 반면, 일반 소규모 사업장이 적정 냉난방 온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율적 계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2.5%로 나왔다.

■ 지식경제부는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2.8% 증가했는데, 상업·공공용 건물의 냉방용 에너지소비는 연평균('00~'06) 10%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 과도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업·공공용 건물 중심으로 냉난방온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1차 에너지소비(백만toe) : (02)203.5 → (05)228.6 → (07)234.1

* 상업·공공용 건물 에너지 중 냉난방용 비중 : 53%

* 상업용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원단위 추이(Mcal/m²) : (98)158.5 → (01)182.9 → (04)210.4

* 상업·공공건물의 냉방 에너지소비 증가율(00~06년 연평균) : 10%

■ 한편, '05~'07 3년간 시민단체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적정온도 준수여부 조사결과, 평균 준수율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지식경제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그간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관련 간담회, 토론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연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 소비 건물로서 의무적 에너지 진단대상이며(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 32조), 주택을 제외한 599개 건물이 해당함